

‘함께 혁신’으로 투자유치 11조 돌파

전북도 · 새만금개발청, 기업유치 위한 합작품 평가 기업애로 해소에 도내 14개 시·군 함께 나서 지원

전북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투자액 규모가 11조원을 돌파한 것은 전북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그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과 제도의 혁신이 이룬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손을 맞잡고 뛰어나는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도는 도내 대학,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호흡을 함께 하며 전북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긴밀한 소통·협력이 밑거름이 돼 기업들의 전북 행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기업유치를 도정 제1과제로 삼고 유치활동을 펼치는 도지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

지원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해 발을 맞춰 나가고 있다.

김 지사를 필두로 한 기업유치추진단이 기업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유치애로해소지원단은 유치된 기업의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지원 사격 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유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시스템”은 기업의 전담공무원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이 함께 나설 예정이다.

도가 올해 기업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1,377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2건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실시간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나

서는 등 기업과 더욱 가까워 자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해질 예정이다.

기업 친화에 입각해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호남권 유일의 전북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펼치며 기업과 구직자간의 취업 연계 사업, 노사화합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대학과 교육청, 도가 참여하는 상설기공인 교육협력추진단을 발족해 기업유치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북도가 대한민국 정부

로부터 기업부담은 줄이고 기업활동에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이끌어 낸 것이 11조원 돌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 가능하다. 새만금 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유치는 단 한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설득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며 “도는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해 수없이 문을 두드릴 것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혁신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기업유치는 물론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도내 대학,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매우 감사하다”며 “경제부흥을 통한 전북 발전이란 공동 목표를 더욱 힘을 합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2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임상규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특자도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준비

내년 1월 18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전북특별자치도로 발급

전북도는 2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시스템 관련 전북도 실과과장, 14개 시군 기획부서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KIID)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데이터 전환 절차, 장애예방 및 비상대책 방안 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 4일, 11일 2회에 걸친 모의훈련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데이터 전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 전환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 및 14개 시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

스팀을 구성해 시스템 안정화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별로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해 장애대응매뉴얼을 마련해 14개 시군과 장애발생 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중앙부처시스템(280여개)도 소관 실과과에서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고, 데이터 전환 요청 및 출범 전·후로 시스템 관련 사전 조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관련 지침을 시군에 공유하고 출범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선8기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작업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방송, 언론보도,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요청드린다”며 전북도 소관 시스템 실과소 및 14개 시군에 협조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고려 후기의 걸작품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

조형미 빼어나...도 10번째 지정

전북도는 작년 12월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이어 국가유산 보물(지정일 1963년 1월 21일)인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鐘)’이 국보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대형 동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으로 한국법종사와 제작기술 및 기

법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동종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및 봉안처 등 종을 만든 기록인 주종기와 종을 옮긴 기록인 이안기가 종의 표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주종기를 통해 도인(道人) 허백과 종의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고종 9) 제작한 사실과 본래 부안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동종을 제작한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고려사 청동북(1213년), 복천사 청동북(1238년), 신흥사명 소종(1238년), 육천사 청동북(1252년) 등 38년을 활동하며 여러 작품을 남겼다. 내소사 동종이 그의 대표작으로 고려시대 동일 작가가 여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남긴 사례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양식, 의장, 구조 등에서 한국법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번 국보 지정을 통해 전북은 총 10개의 국보를 보유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의 문화유산에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국보로 지정돼 기쁘게 생각하고, 우수한 전북의 문화유산의 국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부안군과 협력해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27일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6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도내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에 이어 여덟 번째로 개최된 이번 실무협의회는 2024년도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추진 방안

과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및 계획,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기관·기업 및 대학별 협력사항 등이 논의됐다.

지역인재채용은 이전기관 신규 채용시 최종학력이 이전기관이 소재하는 광역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2023년 30%로 제도의 실

행력 확보를 위해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0년 28.3%(목표 24%), 2021년 36.5%(목표 27%) 2022 32.8%(목표 30%)로 의무화 비율을 매해 초과 달성해왔다.

주요안건으로 2024년도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일정 및 주요 프로

그램(오픈캠퍼스, NCS 특강, 이전기관 채용정보 안내, 취업선배 토크콘서트, 채용상담 등)에 대한 내년도 추진 계획 및 변경 사항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이전공공기관에서는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실적 및 2024년도 채용 계획 등 지역인재 육성과 채용에 대한 현안 사업 △이전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대학생 직무·현장실습 교육과정 등을 공유했다. /김재훈 기자

김동구 도의원, 창업패키지 지원 선정기업 도약 간담회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라북도 윤세영 창업지원과장, 이창호 창업정책팀장, 국립군산대학교 지식산업지원단장, 관계 공무원, 선정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상호성 있는 창업지원 정책 및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동구 의원은 “전라북도 창업가의

성공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신규로 시작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성공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군산지역 내 창업보육 공간(지식산업센터 등) 건립’, ‘R&D 사업 공동참여 기회 제공’,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금리지원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김재훈 기자